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사개요

10:00 좌장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단국대 교수)
발제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10:30 토론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위원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권종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목차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4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15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16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위원	19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20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34
토론 : 권종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38

발제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

22대 총선 농정공약 평가

-시민·농민단체가 제안한 25개 공동공약을 중심으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임영환 위원장

1. 시민·농민단체가 제안한 25개 공동공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2024. 2. 20. 공개적으로 제안한 25개 공약은 크게,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기본권실현, 농지보전과 임차농보호, 농업기반강화, 여성농민기본권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등 7가지로 구분된다.

○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1. 기후기의 대응]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자원(경종-축산)순환 생태농업 확대

[2. 식량주권 실현]

- 농민기본법 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제도화
- 채소류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중단

- 계약재배 확대에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3. 먹거리 기본권 실현]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

[4.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 농업진흥지역 보전 및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
- 임차농 보호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5. 농업 기반 강화]

-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강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제정
-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

[6.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7. 농촌·지역 소멸 대책]

-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공공의료 추진

2. 시민·농민단체가 제안한 25개 공동공약에 기초한 정당별 농정공약 비교

[1. 기후기의 대응]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자원(경중-축산)순환 생태농업 확대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중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 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저탄소사료·저탄소사양관리기술 개발·보급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기후위기 재해의 피해와 손실로부터 농어민·농어업 보호 ■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강화하여 2027년까지 농어민 기본소득 포함 공익직불금 12조 원 편성 ■ 무농약-유기농-생태농업 직불금 단계별로 인센티브 지급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기후위기 재해의 피해와 손실로부터 농어민·농어업 보호 ■ 농어민 참여형 기후생태자원 허브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제로 기술개발, 연구활동, 자원양성, 교육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생태정책실 신설, 기후위기 대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개편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자체 보험료 지원 인상 ■ 농업 산재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농업 산재를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으로 인정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인 부담 전액 지원

[2. 식량주권 실현]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기본법 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제도화 ▶ 채소류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중단 ▶ 계약재배 확대로 가격 및 농업소득 안정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식량주권 특별법 제정</u>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자급목표 명시 -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등 실행 방안 마련 ■ <u>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u>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 시 농가 피해 보전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식량주권법을 제정</u>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 60% 유지 및 농지확보 명시,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권리보장 ■ 도심 지역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운영, 수도권 각 도시에 로컬푸드직매장 개설, 동네 농민시장 활성화로 농민은 안정된 가격 보장, 시민은 신선한 먹거리 보장 ■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폐지하여 유통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 ■ <u>농산물 목표가격위원회를 설치</u>하여 지역 특성 맞춤 대상 작물에 <u>가격 보장제 도입</u>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농민기본법 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주권 실현 및 식량자급 달성 - 농민 정의, 농민 권리 보장, 농민의 적정 소득 보장 - 농지 보전과 확충 - 농민·농촌·농업기본법(농민기본법) 입법 ■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 톤 이상 확보 - 쌀 자급률 100%를 법률에 명문화해 식량주권 실현 ■ <u>농산물 최저가격 보장</u>을 헌법에 명시

[3. 먹거리 기본권 실현]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법 제정하고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교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바우처와 식생활 교육지원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50% 달성 ■ 대학생 ‘반값점심’,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친환경 쌀과 농산물, 동물복지에 기초 생산된 육류 공급 의무화 ■ 채식선택권 보장 및 채식쉐프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먹거리기본권보장체계에서 전국민 생활습관병 예방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연 2회 전문 기관에서 먹거리 방사능 검사 제도화
진보당	-

[4.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 농업진흥지역 보전 및 소유농지에 대한 보상 ▶ 임차농 보호 :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막을 대체하여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촌체험주택을 「농지법」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적용 ■ 지자체의 개발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여 5년마다 농지전수조사 실시 ■ 정치인, 공직자 및 가족 소유 농지를 공공 수용하여 농지는 행이 관리하고, 해당지역 농민, 친환경·생태농업 농민들에게 최소 10년 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농지보전과 확충

[5. 농업 기반 강화]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설립 규정 강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농산물의 농가 생계비가격(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제정 ▶ 농업노동력 확보 대책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근로자재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 센터·지역 간 인력 정보 교류·연계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반값 지원 연간 200만 원, 친환경 농자재는 경작지 친환경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 원 확대 지원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농자재지원법 마련 및 입법 ■ 영농 필수품목 국가 관리제 도입 ■ 농민기본법 제정과 필수농자재 지원 법제화

[6.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성 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농어민을 경영주로 등록 ■ 농촌여성정책팀을 여성농민정책관으로 승격, 여성 농민들을 위한 권리보장 및 정책 개발 특화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민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민 전담부서 지자체별 설립 및 인력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 들녘 별 화장실 설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보급 -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자 주체로 보장

[7. 농촌·지역 소멸 대책]

제안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수당(기본소득) 법제화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공공의료 추진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청년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현)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5년 (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 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 인상 및 개선 - 법개정*과 연계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 의사 양성법 ■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위라벨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 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stay) 구축 -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농어민 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2030년 월 50만 원으로 확대</u>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농민수당법 제정으로 매월 150만 원 지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여성농민 배제 없는 모든 농민에게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실시 - 농민수당 제도 운영에 농민 참여 보장 ■ 농촌순환경제 제도 도입

[8. 이외 정당별 주요공약]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농산업 육성 ■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 및 수출 확대 ■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u>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u>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중심 농정 실현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여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추진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 연장 ■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사고 및 기후위기 등을 포괄하는 농어민의 산업재해 보상 도입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광역단위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 농어촌 주민 건강 피해 사례 조사 및 의료 지원 ■ <u>국가 예산에서 농수산물분야 예산을 2024년 현 3.7%에서 2027년 6%까지 증액</u> ■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정책보조사업은 폐지

3.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재해보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법률 제정 대신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수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식량주권 실현 분야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은 각 식량주권특별법, 식량주권법,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식량자급을 확보를 명문화시키는 공약

을 제시하고 있음.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손실보전을, 녹색정의당은 농산물 목표가격위원회를 설치하여 가격 보장제 도입을, 진보당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공약을 제안하고 있음. 반면 국민의힘은 쌀값에 한해 제안하고 있음.

○ 먹거리 기본권 실현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기본법 제정 공약이 눈에 띄고, 녹색정의당은 먹거리 기본권보장체계 구축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 공약이 두드러짐.

○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분야에서는,

농지를 농업의 생산수단으로 보전의 대상인지 아니면 자산의 한 형태인 부동산으로 보는지에 따라 각 정당의 입장 차이가 있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농지보전을 전제로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제시하거나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그 용도가 경작과 그 부적인 업무로 제한된 농막에서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정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까지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농지보전이라는 헌법 및 농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공약임.

○ 농업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모든 정당들이 필수농자재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를, 국민의힘은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을, 녹색정의당은 농자재는 200만원 지원, 친환경 농자재는 300만원 지원 공약을, 진보당은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을 공약하고 있음.

○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녹색정의당은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여성 농민을 경영주로 등록하는 공약을, 진보당은 입법 공약으로 여성농민법 제정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농촌·지역 소멸 대책 분야에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농민수당 또는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 지급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연간 120만원, 녹색정의당은 1인당 월 30만원, 진보당은 매월 1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토론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

토론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사과, 금대파로 연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온 언론을 장식하였지만, 정작 농민들의 고통은 빠져있다. 기후재난으로 농사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산비는 급등하고 수확량은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은 죽든 말든 농산물을 수입해서 식량안보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농민들의 생존권은 잘 언급도 되지 않는다.

사과, 대파 가격이 왜 폭등했는가? 갈수록 더해지는 기후재난에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업에 투자해야 할 농업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며 대형 유통업자들과 수입업자들 배만 불리고, 농민들은 국민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연간 농업소득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10년간 그대로인 농업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어 상당수의 여성농민들은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하면서, 요양보호사, 학교급식종사원 등 파트타임 일을 겸하면서 농가소득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심각한 농촌인력난으로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들의 지위와 권리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4대보험을 적용받는다라는 이유로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되고, 행복바우처, 농민수당의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유령농민이 되어가고 있다. 여성농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조차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어떠한 보장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농가중심의 농업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인 농촌사회문화는 농가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많은 여성농민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거의 모든 정책전달체계가 이장을 통해 대부분 남성이구주인 경영주 중심으로 전달되어, 정책이 있어도 여성농민들은 몰라서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들이 함께 끊임없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여성 정책팀이 신설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농촌특화형 성평등강사 양성과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맞는 성평등교육과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수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는 아직도 농촌여성정책과가 아닌 정책팀으로 있어 언제 없어질지 몰라 여성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는 이번 22대 총선 각 정당들의 농정공약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한 농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여성농민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건강권 실현 등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늘리는 정도에 그쳐 있다.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체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성평등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으로 정책추진체계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농촌지역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은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머지않아 중소도시도 소멸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젊은 여성들의 거주에 따라 지방소멸이 나뉜다. 이는 곧 젊은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촌지역은 아직 가부장적 제도 및 문화가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 도시지역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지방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촌지역에서 성평등한 농업정책과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여성농민들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농민중심의 성평등한 농업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여성농민들은 지역에서부터 여성농민 권리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서,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갈 것이다.

토론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위원
----	---------------------

토론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

위기인식과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연대·정치연대 강화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지역재단 이사장)

1. 정부의 3농(농민·농업·농촌) 패싱

- 0.73% 간발의 차이로 농민과 국민의 삶을 책임진 정권이 지난 2년간 ‘양곡관리법 거부권 1호 행사,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농정 중심, 농촌쇠퇴·지역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집약되듯이 농민·농업·농촌 3농 없는 농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농민과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농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살리는 농정대전환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2. 3농(농민·농업·농촌) 위기, 먹거리 위기, 지역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 국민적·국가적 위기 대응의 대전환 필요

- 22대 국회의 과제는, 오늘 농과 먹을거리, 지역의 위기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농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위기와,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의 위기를 바로 인식하여 전환적 처방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의 복합적·전면적 위기에 처한 국민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상황에 대응하여 농업&먹거리 진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 전환 공동정책제안,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제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이 후보들 농정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문제는 현실 위기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전략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 추진에 있으며, 진보개혁 야당들로 하여금 대전환 쟁취 전선에 여하히 매진하게 할 것인가? 의석 2/3가 되지 않아도 여하히 국민과 함께 제도의회정치와 광장정치와 당사자 직접정치의 삼위일체 연대 전선에 주체로 나서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3. 전환적 처방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사회연대와 정치연대가 관건

- 22대 국회가 오늘 위기를 바로 인식하고 농민·소비자와 소통·협력하여 그나마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을 제대로 이행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바람일 뿐입니

다. 다시 3농 패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농업&먹거리 진영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만이 아니라 농촌주민, 나아가 소비자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국가공동체의 유지·발전에 농업·농촌·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하여 근본적인 농정대전환을 촉구·견인해내는 정치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 22대 국회, 정책화·입법화를 위한 (농·도-생·소)시민사회와 제 정당 간 연대·협업 체계 상시 운영

농&먹거리 시민사회의 공동정책안이 그동안 매 선거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있어 온 제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위한 선거 대응 전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긴박한 위기 인식과 그 절체절명의 해법 마련 및 구체적 국가책임정책 추진을 방기하고, 농촌·도시-생산자·소비자의 민생 위기와 국가적 지속 불가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22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제 정당 간 정책화·입법화를 위한 연대·협업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데 서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공동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1) 핵심의제들 정책화·입법화를 추진하는 연대회의의 상시 운영

- 핵심의제들 공동설정, 정책·입법화 연대·협업 활동 기획 추진 등

2) 핵심의제들에 관한 국회 내 상설 연대포럼 운영

- 핵심의제들의 상시 숙의기구로서 대안농정연구포럼 구성·운영
- 국회의원(농해수위+태 상임위), 시민사회(농민/소비자/전문가) 공동 참여
- 핵심의제별 정책·입법화 위한 정책조사연구, 국민 공론장 운영, 대국민 홍보·조직화 등

3) 관련 의제 국민캠페인 공동행동 추진

- 권역단위 주민대회, 전국단위 국민대회, 정책포럼, 여론조사, 정책·입법화 국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등

4. 먹거리연대 차원에서 제정당 주요 정책공약 공통의제 : 붙임

먹거리연대 등 공동정책안과 제정당 주요 정책공약 공통의제

공동정책안	제정당 주요 정책공약	
<p>I. 먹거리 보장과 돌봄</p>		
<p>●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Non-GMO 국산먹거리 학교 등 공공급식 우선조달</p>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LMO법 개정
<p>●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p>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p>●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p> <p>- 영유아기(보육시설), 아동·청소년기(교육시설), 청년·중장년기(직장), 노년기(복지 등 생애주기 기관·시설) 등의 시설별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을 설계하여 확대</p>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및 강화 • 천원의 아침밥을 넘어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5일 점심밥상 제공 •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인력을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치
<p>● 먹거리 긴급 돌봄 체계 (시범)도입으로 먹거리 안전망 혁신</p> <p>-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 먹거리 지원을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연계 도입, '(가)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지원 법률' 제정 추진</p>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p>● 공공급식(유초중고와 영유아+대학+군대+공공기관 등) 3무(無)+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확대와 공공급식소 건강·안전 환경 조성</p> <p>- GMO, 방사성물질, 기후위기가 없는 Non-GMO, 無방사성물질, 저탄소 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 공적조달 체계 구축</p> <p>- 공공급식소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안전 식단 운영(식재료, 조리방식, 조리시설 및 환경 등)</p>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조달 전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 추진 • '21년 군 급식비 기준 수산물 급식 비중(12.5%) 유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반값점심',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친환경 쌀과 농산물, 동물 복지에 기초 생산된 육류 공급 의무화 • 채식선택권 보장 및 채식웨프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먹거리기본권보장체계에서 전국민 생활습관병 예방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연 2회 전문기관에서 먹거리 방사능 검사 제도화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법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 먹거리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참여 기구 설치·운영 ●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사·도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법 제정 -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먹거리 기본권 제도화 - 국가먹거리위원회(가) 신설로 국가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체계적 추진
<p><공동정책안> 요구과제 중 제정당에 없는 정책공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곡물(쌀·밀·콩)+7대 발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 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 생활SOC와 연계하는 사·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운영 * 읍·면·동 공동체식당 기반 먹거리 식생활 돌봄 전담사 운영 *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 등의 국가사무 전환에 의한 식단가 지역별 격차 해소로 지자체 간 먹거리 형평성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현물 지원 * 도시·농촌 연대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 '(가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법률' 제정, 지역 간 먹거리정책협약 통한 도농상생 급식체계 구축 * 먹거리시민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식생활교육 의무화와 노동자·청년·군인 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 국가 직무능력(NCS) 기반 식생활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II.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기후 재난 대응 재해대책 강화 - 피해복구지원단가 실거래가 수준 상향, 비보험 분야 피해보전, 보험료 지원 확대 - 농어민 기후재해 대응지원 제도화로 (가)농어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보험·친환경 작물 등 기존 재해대책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의 기후재해 대응활동 지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 농어업재해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 실거래가로 상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을 강화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추진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와 재난 대책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인상 - 농업 산재 국가 관리화, 4대보험의 산재보험으로 인정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인 부담 전액 지원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20% 확대, 친환경·생태 농업전환 제도화 - 친환경농업 재배비중 확대('30년까지 20%로) - 친환경직불 지급단가, 관행농업과 소득격차 100% 지급 - 유기 전환기 지원 신설 등 친환경직불 예산 증액 -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친환경·생태 농업 전환 직불제 전면 도입 및 농업의 생태 전환 촉진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농업 비중('22년 4.5%) 확대('30년 20%) 및 친환경직불제 인상 •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 100%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50% 달성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p>●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축산법」 체계→「축산법」+축종별 법률체계로 개편 -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p>●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식량안보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상향의 구체적 목표 명시 -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규모 확보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와 병행) 및 임차농지(부채지주) 문제 대응책 마련 △식량자급률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총량제 실시(곡물자급률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보전)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비중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농지전용허가권을 회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

<p>● 농업의 친환경생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생산·소비 균형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지원</p>
--

<p>● 쌀·밀·콩 등 주요 양곡과 7대 발작물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에 추가하여 밀·콩을 법에 명시하고 수급계획 수립(논 생산조정 법제화 등),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대 발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포함, 재배면적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해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보전(가격안정제) 도입 -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산업전환법 제정 등 축종별 전환 및 육성 지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축사 보급확대 및 ICT기반 가축사양관리 강화로 축산업 선진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지원 •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축산업 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으로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 자급목표 명시 - 필요 농지 및 예산 확보 등 실행방안 마련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농지확보, 식량자급률 60% 달성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해 5년마다 농지전수조사 실시 - 정치인, 공직자 및 가족 소유 농지를 공공 수용하여 농지은행이 관리하고, 해당지역 농민, 친환경·생태농업 농민들에게 최소 10년 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 - 식량주권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식량자급률60% 유지 및 농지확보 명시,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권리 보장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농촌·농업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대혁명, 농정대전환)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권리 실현, 국가책임농정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곡물 및 발작물 자급률 제고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손실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미국, 일본 등 시행중) -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TRQ) 수입 시 농가 피해 보전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지역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운영, 수도권 각 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동네 농민시장 활성화로 농민은 안정된 가격 보장, 시민은 신선한 먹거리 보장 - 도매시장의 경매제를 폐지하여 유통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 - 농산물 목표가격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 맞춤 대상 작물에 가격 보장제 도입

제와 먹거리정책(지역먹거리계획 등) 및 농산물 수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하고 과도한 농산물 수입을 조절

● **농산물 생산비안정제(필수농자재지원제) 도입**
 - 무기질비료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사료비 부담 완화 등 생산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 (가칭)농업기후적응기금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생산비안정제 도입
 - 저탄소농업 실천 및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연계하여 생산비 절감 유도

●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
 - 선택형 직불제 대폭 확대강화(기존 4개 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락작물직불제)
 - 생산조정직불제, (저)탄소농업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추가해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 친환경·생태 전환
 - 농정예산을 농어민 직접지원방식으로 전면 구조조정하는 농정예산 개혁을 통해 **현행 3.1조원 공익형 직불예산을 현 정부 말 최소 8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농정예산을 적어도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여 국민농정 추진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 쌀 생산 안정화, 농지 확보 - 공공비축미 물량 100만톤 이상 확보 - 쌀 자급률 100% 법률 명문화해 식량주권 실현 농민헌법 제정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새 개헌으로 농업의 근간·본질을 규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비료·사료값 상승, 유가·전기료 급등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추진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자재 반값 지원 연간 200만원, 친환경 농자재는 경작지 친환경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 확대 지원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 농산물 생산비 보장, 영농 필수품목 국가 관리제 도입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직불제 인상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 소득 격차 해소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가 인상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도입 등 공익형직불제 확대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산림공익가치 보전직불제 도입과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 임업생산을 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산불예방, 병해충예찰 등)하는 산주에게 직불금 지급 - 조세 제도상 농·임업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강화하여 2027년까지 농어민 기본소득 포함 공익직불금 12조원 편성 - 무농약·유기농·생태농업직불금 단계별로 인센티브 지급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 농어민 기본소득 1인당 월 30만원 지급, 2030년 월 50만원으로 확대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민수당법 제정 :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 - 모든 농민 매월 150만원(중양 100만, 지자체 50만) 지역화폐로 지급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

<p>● 농어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노동력 국가위원회 설치 등 내국인-외국인, 상시-계절 수요에 체계적 대응 위한 민관거버넌스 설치-운영 - 농어업노동 관련 비자, 송출국과의 협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에서 내국인-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

<p>●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농업-먹거리 정책 책임성 강화와 국민 전체를 위한 주요정책 시행 위해 국가전체예산 5% 이상으로 확대

<p>●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종사상 지위를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유급/무급), 그리고 피고용 지위로 구분하고 경영체 등록시 위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법 개정 -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신설 - 여성농어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농어민정책 시행 등 여성농어민 정책체계 구축 - 농어민등록제 도입으로 양성동등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p>●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준비-심화-독립' 지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농촌 이주 전 단계의 인큐베이팅 체계, 1년 이상 농촌 정착 준비 지원.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3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5년간 최장 매월 110만원 지원) - 청년의 농업 정착을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식량안보, 청년 임대, 미래 농업 등을 고려하되, 우선 쌀 과잉생산물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 약 4만ha를 목표로 매입 추진하고 해당 농지는 타작물재배 의무화)
--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 등 국가 책임 강화 - 광역단위 인력 순환 위한 지원센터 및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 공공형계절 근로 자제 확대, 근로환경 개선(교통비·보험료·숙박비 등) • 센터-지역 간 인력 정보 교류-연계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예산 비율을 6%로 증액 - 국가 예산에서 농수산물분야 예산을 2024년 현 3.7%에서 2027년 6%까지 증액 -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정책보조사업은 폐지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민정책관 신설 - 농촌여성정책팀을 여성농민정책관으로 승격, 여성 농민들을 위한 권리 보장 및 정책 개발 특화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민법 제정 : 농업의 주체, 여성농민 - 여성농민 전담부서 지자체별 설립 및 인력 마련 -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 들녘별 화장실 설치 -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보급 -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자 주체로 보장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농자-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현)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 5년(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 하는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청년농업인 정착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및 청년농 보금 자리 주택 확대

<p>● 지방정부의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농정 지원</p> <p>-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대의기구화 참여형 자치분권농정 지원 등 지방정부 농정 거버넌스 제도화</p>	<p>더불어민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민 중심 농정 실현 - 농어업인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p><공동정책안> 요구과제 중 제정당에 없는 정책공약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주체 육성을 위해 농어민등록제 실시 * 대통령직속 민관협치농정체계 구축 : 단순자문기구 대통령직속 농특위를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부처들 실행계획 이행점검·평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민·소비자·정부 간 실효적인 민관협치기구화 	

Ⅲ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

<p>●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어촌주민에게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 추진</p> <p>- 소멸위기 시군의 면지역(인구 3,000명 이하)부터 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과 농어민기본소득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 도입 후 단계적 확대 : 범부처의 지역개발예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대폭 조정과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한 재원 조달</p> <p>- 절반 이상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p> <p>- 지원액 일부를 마을공동체기금으로 공동 조성, 마을자치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재원으로 운영 지원</p>	<p>더불어민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 단계적 지급 -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p>진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순환경제 제도 도입 : 농촌 지역 소멸 대책 - 농촌공동체 구축 - 농민수당의 농촌거주수당으로 확대 - 농촌정주여건 개선
	<p>더불어민주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p>● 농어촌주민들에게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으로서 행복권을 보장</p> <p>- 읍면단위 공동체식당(커뮤니티키친)</p> <p>- 마을담당 사회복지사제도</p> <p>- 마을주치의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p> <p>- 1면 1초·중학교 유지·육성</p> <p>- 농어촌주민 주거복지 실현</p> <p>- 읍면 버스 무상·완전공영제 도입</p> <p>-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전면 구축</p> <p>- 농어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공공·사회적경제 조직 등) 보급, 주거복지 충족과 귀농어·귀촌인 주거해결</p>	<p>더불어민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 인상 및 개선 - 법개정*과 연계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 의사 양성법) •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농산어촌 교육지원 :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구축 - 낙후된 지역과 학교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생활 생태계를 교육청, 지자체, 지역산업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 운영 • 학교, 관공서, 유치원, 보건소, 마을회관,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 시설 운영 • 도시 거주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 확대 통해 농산어촌 소재 학교 운영 유지
--	---------------	--

- 농어촌주민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육성·지원

<p>국민의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및 수혜지역을 대폭 확대, 중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 2024년부터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단체 또는 병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 중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전체로 확대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 기한 연장 •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 지역에 폐교, 유휴부지 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제공·지원할 수 있는 '국립예술지원센터' 조성 • 마을별로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여 해당 마을에 가스를 공급하는 농촌형 생활에너지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추진
<p>녹색정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 국민 산재보험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 • 농어민 건강은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 사고 및 기후위기 등을 포괄하는 농어민의 산업재해보상 도입 -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광역단위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 농어촌 주민 건강 피해 사례 조사 및 의료 지원 • 전 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개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 폐교 공간을 이용한 공공요양원 설립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 '빈집뱅크' 운영으로 빈집 소유주와 입주희망자 연결
	조국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 돌봄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 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p>●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로 행복농촌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서비스 취약 300개 읍면 거점에 '생활복합센터' 확충 - 공공임대주택, 혁신학교, 마을주치의, 사회적농업, 교육농장, 농촌유학, 일자리 등이 결합된 '행복농촌' 추진 - 휴식이 필요한 국민에게 치유농장·마을, 치유지구 제공 <p>: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건강보험과 연계, 민간 건강관리 손해보험 상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교류·살아보기·이주 정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도농융합 상생마을'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 형성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부문 주체 육성)

<p>●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어촌 주택 이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농촌주택(3촌4도) 활성화, 관계인구 확대와 정착유도 - 취득세 면제대상·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범위 확대 - 귀농·귀촌 및 실거주 등 대상 조건 명확히 하고 점검 철저히 투기화 방지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과 기업은 손쉽게 참여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에 제안하고, 국민 호응도 및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온라인 영상회의 시설 등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및 지역체험 프로그램[현재 운영중인 워케이션프로그램 -(강원양양) 요트체험, (제주) 낚시체험 등]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 빈집 정보 공유 및 개량 지원 확대, 마을단위 빈집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 지원,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stay) 구축 -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 농막을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공간(휴식, 숙박)으로 양성 -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 및 확대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airbnb)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선 - 주택 수 제외로 증과세율 적용,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세, 취득등록세 세제 특례 혜택 적용 확대 추진 • 비수도·비광역·비도심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농막을 대체하여 임시숙소나 주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되 절차는 간소화된 '(가칭)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 농촌체험주택을 「농지법」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및 「건축법」 시행령 적용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 활동 조직 운영**
 - 지역청년, 도시청년 지역활동조직 구성운영 지원 : 최소 3년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지역 살리기, 주민의 생활지원, 기타 공적인 역할 등을 수행
 - 3년 후 지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및 자립 활동 지원
 * 청년생활 서비스 패키지 지원(주거, 일자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및 행복택시, 청년공간 등)
 * 청년 자립활동 지원(뜨래집단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 청년문화 활동 보장 지원 등

● **마을공동체 태양광으로 주민주도 소득형 재생에너지 실현(에너지 자립마을)**
 - 마을공동체 태양광을 추진하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외에 농지전용 없이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으로 제한하며,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 등 우려사항 해소
 - 농촌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으로 개선
 ●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농어촌 생활인프라의 그린화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의 문제점 해소와 농촌 난방문제 해결
 * 열병합발전·배관 교체로 농촌 난방문제 해결
 * 농촌 건축물 에너지 절감형 모델개발 보급 등
 - 시설원예, 농산물가공 분야 등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더불어민주당

- 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을 재창조하는 청년마을이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
- 청년마을과 마을기업 및 워케이션 센터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허브 구축

더불어민주당

- 마을 공동체 주도 태양광·농림어업 부산물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확대
- 마을회관, 주택·축사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및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
-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 및 투기자본 유입·농지전용·임차농 피해·식량안보위협 등 우려사항 해소
- 가축분뇨·목재·어패류·음식물·작물 등 바이오(가스·매스)의 재생에너지화
- 농업인·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
 - 발전이익 공유제로 주민에게 연금 또는 난방비 지급
 - 재생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로 인근 시설하우스 난방 사용
-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추가 가중치 부여 및 수상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으로 대상 확대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

<p>● 읍면동 주민자치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읍면동 주민자치제 실시 * 읍면동을 기초자치정부로 전환 - 주민주도의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들의 심의의결권 보장 :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총회로 자치에 필요한 주요안건 심의의결 - 주요사무는 자치행정, 조세, 에너지환경, 건축건설, 교육, 복지 등 - 독립된 읍면동세 도입 또는 시군 세원(재산세, 주민세 등)을 읍면동과 공유 	
--	--

<p>● 읍면동에 주민의 자치·협동 조직을 지원·육성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어촌 자치공동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경제협동과 생활협동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집중 육성·지원 - 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를 지원하는 읍면동별 마을사무장 평균 5인씩 채용(향후 법정리별 1인씩 마을사무장화)하여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영농지원 등 공동체활동가제도 도입 	
--	--

더불어민주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 극복 (농림해양수산 분야) - 목표 : 전 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전국민 햇빛 바람 연금 도입 :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발생한 수익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발전이익공유제로 주민연금 지급
조국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체계전환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마을행사 개최, 위탁사무 담당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 수행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 신설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통합적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 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사회연대신협 설립 유도 - 수신기능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을 지원
녹색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 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 •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
<공동정책안> 요구과제 중 제정당에 없는 정책공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기구로서 대통령직속 <농어촌 살리기 부처간 위원회> 설치·운영 * 농촌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년 3월 시행) 개정 관련 제도 정비 	

토론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5대 정책 과제

□ 제안 배경

○ 기후위기 시대 대응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추진 필요
-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농촌을 핵심으로 다양한 대응 및 적응 전략을 추진
- 세계자원연구소(WRI)가 발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16)을 보면 농림업과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18.4%이며, 생산-수송-포장-소비-폐기까지 먹거리 전 과정을 포함하면 최대 37%(FAO)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의 배출량을 예산 비중과 같은 2.9%로 추정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친환경농업 면적, 예산 감소

- 2009년 전체 경지면적의 12.2%에 달했던 친환경농업이 매년 감소하여 2023년 12월 기준 경작면적 4.2%, 4만 8천 농가로 감소
- 유기농업을 하는 면적은 전체 농지 중 오스트리아 27.5%, 스위스 17.9%. 독일과 프랑스는 10% 내외, 이탈리아는 17.9%이지만 우리는 아직 2.4%에도 미치지 못함
- 친환경농업 확대에 필요한 친환경농업 예산은 최근 5년간 10% 감소
-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 필요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실현 필요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대부분 달성하지 못했고, 5차 5개년 계획에서도 특별한 방안을 세우지 못함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20년까지 8%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기준 4.2%로 달성하지 못했고, 화학자재 사용량도 2014년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kg/ha에서 각각 8.5kg/ha, 235kg/ha로 낮추

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2021년 10kg/ha, 266kg/ha으로 오히려 증가

○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필요

-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목표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대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만으로 왜곡
- 결과 중심의 안전한 농산물과 경쟁력이 주된 목표가 되어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과정 중심의 생산은 소외된 채 투입 자재에 의존

□ 제안 내용

1 친환경직불금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소득감소 보상
- 환경생태 기여에 대한 평가를 재조사하여 지급 금액 인상 필요
- 친환경농업 실천 외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 확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농자재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자재를 과도하게 투입하는 고투입 농사 지양

2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 결과와 분석 중심에서 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인증제도 전환
- 인증절차 간소화
-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 등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개선 지표 마련
- 친환경인증품목 확대
-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재정비
- 지역인증, GAP, 친환경인증, 저탄소인증 등을 통합관리 하여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

3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현재 일반 벼의 특등가로 수매 (벼 40kg 기준)

	특등 수매가	1등 수매가	차액
19년 산	67,920원	65,750원	2,170원
20년 산	77,620원	75,140원	2,480원
21년 산	76,750원	74,300원	2,450원
22년 산	66,660원	64,530원	2,130원
23년 산	72,440원	70,120원	2,320원

- 5년 평균 차액 2,310원
- 친환경벼 수매가격 현실화 필요
-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배정된 목표량 달성
- 친환경 벼농가 보호 및 전체 논농업(775,640ha('22)) 친환경 전환
- 등급제 신설 필요

4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 현재 학교급식은 지자체별 사업 실시로 인해 지역별 급식단가 차별 발생
- 국비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급식 필요
- 군대, 병원, 관공서, 교도소, 경로당 등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공급품목 확대
- 친환경식재료 우선 공급 필요
- 중앙정부가 예산지원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지방 위임사무를 국가 사무로 개정

5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 행정과 농업인들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관 협력
- 농업인들의 행정 접근성 향상
-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 일부 위탁 가능
- 생산소비연계 플랫폼 구축 및 친환경농업 데이터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 신규 친환경농업인들을 안내, 교육, 지원
- 전국단위, 광역단위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하여 현장 지원체계 구축

토론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

토 론 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권종탁 사무총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집권이후 퇴행과 반동으로 일관한 현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기운이 드센 가운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꼼수와 막말, 언론의 부추김 역시 무도해지고 있다. 또한 ‘정권심판’이 총선을 뒤덮고 있는 과정에 ‘정책’은 실종되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또 한번의 선거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큰 시점에서, 농업농촌농민과 국민먹거리 공약 역시 조명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단체는 지난 2월 20일 7대 목표 25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실천한 농민후보의 공천을 촉구한바 있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 역시 2월 21일 3대 목표 12대 과제를 천명한바 있다. 오늘 발표문과 토론문에 해당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정당의 정책공약 역시 비교표로 제시되어 있어 자료로 대체하고, 짧은 단상과 몇가지 제안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단상

- 농업/농촌/농민과 전국민 먹거리체계에 대한 국가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한국전쟁이후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시대적 환경과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국가기본사업에서 ‘시장산업’으로 편입되고 타산업의 성장에 소비되는 차별적 존재가 됨
- 기후위기, 식량위기의 상황은 미래가 아닌 이미 닥친 현재의 생존문제로, 농업/농촌/농민과 전국민 먹거리체계는 ‘국가의무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헌법적 가치와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현재의 공약의 저변에 ‘산업으로서의 농업’, ‘시장관점에서의 경쟁과 효율’, ‘민원해

소와 복지시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제안

○ 21대 국회 잔여기간(04.11~05.31)에 '발의된 민생법안' 통과와 '약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먹거리기본법, 농어민기본소득법, GMO관련법, 일본핵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등의 민생법안이 준비되고 발의되어진 과정에 쏟은 노력과 자원이 적지를 않음. 이를 '폐회에 따른 폐기'가 진행되도록 두어서는 아니되며, 최대한 21대 국회를 추동하여 통과를 촉구하고, 불능시 22대 개원 즉시 발의되도록 '정당의 공식 약속'을 합의하여야 함.

○ '약속된 민생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개별 의원발의가 아닌, '정당 공동발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 22대 국회 정당간 협약에 의한 상설적 '농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부의 현 농특위와 함께 국회에서도 준하는 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입법과 정책이 숙의되고 발의되어야 함. 이 위원회에 해당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필수적임.

○ 총선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끝>